

# “문제아 낙인...아이 장래 망칠라”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 급증

### 3년사이 재심 광주 10→23건 전남 4→24건으로 크게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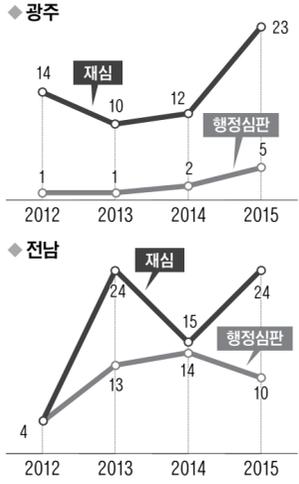
### 학생부 기재 법제화 영향 사제시간 갈등...제도 개선 목소리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장 또는 교육감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는 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의 장래를 망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광주·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기 시작한 2012년 학교폭력 관련 재심 건수는 광주 10건, 전남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재심 건수는 광주 23건, 전남 24건으로 각각 2.3배와 6배 급증했다.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도 같은 기간 광주는 1건에서 5건으로 5배, 전남은 4건에서 10건으로 2.5배 늘어났다.

이는 2012년 1월 교육부가 학교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법제화하면서 재심과 행정심판이 크게 늘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고 기록함에 따라 학부모들이 자녀가 대입 또는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 학교폭력 불복 신청 현황 (단위:건수)



학교장의 처분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 다. 재심은 학교폭력으로 전학 또는 퇴학 조

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전학·퇴학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심리 치료 ▲출석 정지 등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학교장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 교육감이 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불복 행위이다.

제자인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학교장은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자녀의 장래와 직결된다 보니 학부모들의 대응도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강해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사제시간의 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한숨 지었다.

부작용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교사가 타이르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사건도 이제는 학폭위에 무조건 회부해야 하고, 아무리 약한 결정이라도 학생부에 기재돼 폭력 학생으로 낙인 찍히는 탓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학생부 기재보다는 학교장의 재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교육부 “표지갈이 교수 재임용 탈락 등 엄중 조치”

## 광주·전남 최소 6개 대학 포함

### 대규모 퇴출 사태 예고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광주·전남지역에만 최소 6개 대학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에 대해 징계와 재임용 탈락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지역 대학가에 태풍이 불어칠 전망이다.

16일 의정부지검과 교육부에 따르면 ‘표지갈이’ 혐의로 기소된 179명의 대학교수 중 광주·전남에 소재한 대학은 최소 6곳이 확인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대표 대학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의 주요 4년제 국립대가 2곳, 주요 사립대 4곳의 이름이 올라왔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14일 광주·전남·전북지역 대학교수 33명을 ‘표지갈이’ 혐의로 기소했다. 원저자가 7명, 허위저자

26명이다. 여기에는 전북의 대표 4년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기소 대상 명단이 통보되면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실정위원회를 열어 연구 윤리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징계와 재임용 탈락, 연구성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교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에 ‘표지갈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부정사례 적발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비 비위와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될 수 있다. 또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도 대규모 교수 퇴출 사태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성매수남 전화번호부 입수

## 원룸서 회원제 성매매 영업

### 서부경찰, 업주 적발

‘손님 명단’이 적힌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회원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6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안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우모(27) 씨 등 중국 국적의 여성 2명도 돈을 받고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성매수남 전화번호부를 입수해 회원제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조리사 등 파업...광주 68개 학교 급식 차질

### 교육공무직 700여명 성실교섭 촉구 시교육청 앞 집회

### 학생들 도시락에 빵·우유 지급...일부 조기 귀가조치도

광주지역 학교급식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교육공무직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68개 학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광주 교육공무직 노조원들 700여 명은 16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해 임·단·협 합의사항 이행과 올해 협상을 둘러싼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하

룻동안 경고성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기본급(10%) 인상, 장기 근무 가산급 상한선 철폐, 학교업무정상화 일방적 추진 철회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날 파업으로 공립 유치원 10곳 등 전체 324개 급식 실시 시설 중 유치원 2곳과 44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4개 고등

학교 등 모두 68개교 급식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16개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하도록 했고 36곳은 학생들에게 빵·우유 등을 지급했다. 7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는 중간 놀이시간을 줄이거나 수업 시간을 단거 급식시간 전에 학생들이 귀가시켰다.

12개 학교는 도시락 자택과 단축수업, 도시락에 대용품 지급 등 2가지 조치를 병행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 1500여명이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앞에서 ‘노동 개약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민노총 총파업...노동 개약 규탄 거리행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노동 개약’ 저지를 내세우며 16일 광주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약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를 비롯해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 등 조합원 150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들은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법은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개약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서구청과 양동시장, 광주역을 거쳐 광주시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한 뒤 ‘노동 5대 법안 철회’ 등을 재차 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 장소와 새누리당사 인근에 경력 8개 중대를 배치했으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 노조도 이날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지 1시간 만에 병원 측과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부터 쟁점 사항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7시50분께 잠정 합의했으며, 노조는 24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뒤 병원 측과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를 비롯해 민주주의 광주행동은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제3차 민중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는 3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조정래 작가 “명의 도용 엄중대처”



○소설가 조정래(72) 작가가 출판사가 인터넷에 조정래 작가 가 쓴 글이라며 떠돌아다니는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 한 번 더 했으면 한다’는 제목의 글 작성자를 가리켰다고 밝히는 등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

○16일 ‘태백산맥’을 펴낸 출판사 해냄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베에 ‘조정래’라는 이름으로 처음 게시된 글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소설가 조정래’ 등의 표현이 더해져 작가의 명예가 실추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

○조정래 작가는 “국가권력에 대한 맹목적 찬양으로 작가의 정치적 입장을 제멋대로 왜곡했다”며 “비문과 오문 등으로 작가로서의 기본적인 수준과 능력마저 손상시키려는 의도로 작성된 글의 유포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협뉴스

#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 장소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 진흥자금 유치 가능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